



[EAI 워크숍] ADRN National Level Workshop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전문가 토론회: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 국제사회 논의 동향
 - 코로나 19 로 인해 SDG 16(평화, 정의, 제도)은 퇴보하는 양상을 보임.
 - 미국,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인권 수호를 위한 가치외교가 강화 중이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쟁 프레임은 심화되고 있음.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는 평화, 인권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는 'B3W Initiative' 제시됨.
 - OECD/DAC 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
- 우리나라 민주주의 ODA 동향
 - 한국은 미국에 비해 원조의 규모와 비율 두 측면에서 모두 부족함.
 - 코이카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를 지원하고, 관련된 UN 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음. 부르키나파소 및 사헬 북부 지역 인권, 평화, 성평등 구축지원 사업이 좋은 예시임. 여가부는 UN Women 성평등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 우리나라 민주주의 ODA 과제
 - 범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원조 전략이나 컨텐츠(모듈)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축해야 함.
 - 서구 국가가 민주주의를 원조의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 대신, 한국형 민주주의 원조 모델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코이카 DEEP 사업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조를 늘려갈 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시민사회와 지방과의 협력을 늘려가야 함.
 - 인권 기반 접근이 필요함.



KOICA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

- 개발협력에서의 민주주의 이슈는 ‘거시민주주의’와 ‘미시민주주의’를 구분하여 생각
 - ‘거시민주주의’ - 서구권 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에서 시장을 작동시키기 위해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UNDP는 지방분권 관련 사업, 민주주의 선거 체계 지원 등을 많이 해 옴.
 - ‘미시민주주의’ - 여성의 empowerment 강화와 조합의 활동을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
 -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이 없어보이나 반부패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흐름도 중요함. SDG가 발전하며 사회개발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이슈에서 개발의 재원조달로 이슈가 발전함. 이에 따라 반부패 레짐이 2015년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로 발전했고, 세금으로 개발의 재원 조달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짐.
 - 베트남에서의 사례 - ‘거시민주주의’ 측면에서 UNDP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거버넌스 인덱스를 매기고 발표함. 베트남 63개 성에서 시민의 부패 경험, 촌지 경험 등을 조사함. ‘미시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호주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 직장내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함. 덴마크는 장애 당사자 조직의 설립을 지원함.
- 코이카의 유관 사업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지원, 젠더 기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반부패 거버넌스 지원 사업을 나뉠 수 있음
 -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 에콰도르 개표결과 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역량 강화사업과 UNDP 동티모르 거버넌스 강화 사업이 예시에 속함.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내부 거버넌스 관행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았음.
 - 젠더 기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 여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이 속함. 페루 젠더폭력 대응 평화 사법 접근성 개선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몽골 성평등한 공공의사결정을 위한 SDG5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 등이 예시.
 - 반부패 거버넌스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대부분 인허가나 세금과 관련이 있어 뇌물 문제를 많이 다룸.
- 민주주의 관련 사업 확대 방향으로는 기존 공공행정이 아닌 거버넌스로 사업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국제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실행을 위한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 최근 코이카는 개발협력 평가 R&D 공모 사업을 준비함. 추가적으로, DEEP 사업은 평가가 힘들어 성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 시민사회의 개도국 민주주의 발전 지원
 -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서구 국가들에 의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됨. 정부와 시장에 맞서 공공성을 찾기 위한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민을 키우는 토크빌식 자유주의 시민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발전함.



- 시민사회, CSO의 발전은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지속적인 공평한 개발과 사회적 결속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 그러나 우즈베크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지 상황을 무시한 서구식 ‘시민사회 제작(manufacturing civil society)’ 방식은 ‘서구의 이미지 이식’으로 비판 받음.
- 현재 시민사회 지원은 다양한 그룹을 대표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자력화에 기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짐. 호주, 캐나다 등 국가들은 인권 및 법, 언론 등에 집중하여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 공여자의 한국 시민사회 지원
 - 독일 EZE, 미제레오는 독일 정부의 ODA를 받아 한국 시민사회를 지원함. 미제레오가 지원한 프로젝트 중 조합 운동, 농민/노동자 운동, 기본권/인권 등은 시민사회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여성 단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세력으로 활동, 이후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에 앞장섬. 이처럼 국제 공여자의 지원을 받은 사회운동 관계자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발전 및 민주화에 기여했음.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민주주의 국제개발협력
 - 현재 코이카는 ‘공공행정 중기 전략’을 만드는 중이며, 코이카가 집행한 ODA 중 공공행정 분야의 비중은 상당한 반면 인권, 성평등 분야는 매우 작은 규모를 차지함.
 - 정부의 민주주의 ODA는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이 가능함. 하향식 접근은 국가제도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상향식 접근은 현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두 접근으로 수원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제안들

- 공여국 정부가 민주주의 원조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수원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따라서 준독립적인 펀드나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에는 시민사회가 포함되어야 하고, 정당도 포함되기를 제안함.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권위주의 경험이 있어 강하지만 그에 비해 입법부나 사법부는 취약한 경우가 많음. 입법부와 기구를 연결하자면 자연스럽게 정당이 포함됨.
- 한국은 자치 외교 수준에서 개도국 민주주의 발전 지원을 할 여건은 안 되지만, 과거 신생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이 경험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음. 이때 나라마다 민주화의 진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평가하고 타깃을 정해야 함.
- 민주주의 원조를 받은 정부가 자원을 잘 분배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한국 CSO와 해외 CSO의 연결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 고민해야 함.
- 타깃 국가와 청중 국가를 구분하여, 선진국을 청중 국가로 설정하여 한국이 민주주의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함.
- 개도국 CSO 간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함.
- 현재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IT 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로 요약 가능함. 이처럼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단기 전략으로 모듈화 작업을 통해 DEEP 사업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해야 함. 민주주의 원조 사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DP 와 함께 하는 게 현실적 전략이나 한국의 경험을 UN 에서 활용할 방안은 고민해야 함.
- 발제자 간 통계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적절한 자료를 받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 개발협력 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수원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함.



- 담당 및 편집: 윤하은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hyoon@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1년 08월 19일 ISBN 979-11-6617-203-8 5 0530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